

모든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상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1. 취지

- 국민의 정보 기본권 보장.
- 정보통신산업의 전반적 발전.
- 장기적으로 행정서비스의 국민 복지의 증진.

2. 개요

- 모든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3단계에 걸쳐 실현.
- 대중교통수단의 핫스팟존화, 공공장소와 주요 도심지에 핫스팟존 설치, 주거지역에서도 무선 인터넷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이끌고 관련 법령을 정비.

3. 방안

사업예비1단계	사업예비2단계	사업실행		
		실행1단계	실행2단계	실행3단계
- 목표설정 - 이해관계자와 의견 조율 - 관련 제도 정비	- 제공서비스 결정 - 적용기술 선택 - 실행자금 조성	- 대중교통수단을 핫스팟존화 - 공공장소에 핫스팟존 설치	- 주요 도심지에 핫스팟존 설치	- 일반주거지역에서 주민과 기업 등이 무선공유기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모델 구축 - 관련 법령 정비

- 사업예비1단계: 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금 조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후 관련 제도 정비.
 - 현재 목표는 정보기본권의 실현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
 -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조율 및 관련 제도 정비가 남아 있음. 주요 이해관계자로는 지방자치단체 당국, 지역 관광 산업, 중소기업, 대기업, 통신사업자 등이 될 수 있음.

- 사업예비2단계: 제공 서비스의 결정, 적용 기술 선택, 실행 자금 조성.
 - 와이파이 네트워크 기반의 무선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이 단계에서 IP당 업로드 속도, 사용 시간제한, 트래픽 증가에 따르는 추가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

- 사업1단계: 서울시의 경우 취임 100일 이내에 서울시내 모든 버스와 지하철을 움직이는 핫스팟존화하는 동시에 버스정류소 지하철 역사, 관공서, 공원, 도서관, 미술관 등의 공공장소에 핫스팟존을 구축.
 - 1단계에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와이브로 망을 와이파이 망으로 전환시켜 주는,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와이파이 라우터(router)를 서울시내의 버스 7,598대와 3,508량의 지하철(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보유한 지하철)에 설치할 예정

- 사업2단계: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지역에 추가적인 핫스팟존을 구축

- 사업3단계: 무조건적인 핫스팟존의 추가 구축이 아니라 사실상 와이파이 접속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망사업자, 기업, 공공기관, 개인 등의 협력을 이루는 과정을 주도

- 와이파이와 접속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통신사가 보급했거나 기업, 공공기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접속 포인트들을 많은 이들이 안전하게, 함께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도구나 표준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

4. 소요예산

- 사업자금의 조달방안은 이해관계자와의 조율을 먼저 거친 이후 제시됨.
-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데이터 보안, 운영·유지·보수, 이용자 서비스 관리 책임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비즈니스 모델, 재무모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방안, 기술 등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것임.

참고: 한국의 인터넷 환경과 진보신당의 무상 무선인터넷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별첨자료 참조.

담당자: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박지훈 정책연구위원

02-6004-2038

parkism@gmail.com

한국의 인터넷 환경과 진보신당의 무상 무선인터넷이 갖는 의미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박지훈

※ 알림

본 문서는 지난 3월 12일에 있었던 진보신당 정책토론회 — “서울 무상 무선인터넷 100일이면 가능하다. 취임 후 100일 이내 지하철, 버스, 공공장소에서 무상 무선인터넷을 실현하겠습니다.” — 의 자료집을 축약·일부 보완한 것입니다.

1. 갈라파고스 증후군(Galápagos syndrome)

○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란 내부적으로는 다양하고 뛰어나지만 외부와의 교류 없이 독자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다 국제표준에서 동떨어져 결국에는 경쟁에서 뒤지게 된 상황을 의미.

○ 오늘날 한국의 많은 이들이 우리의 정보통신 업계 역시 일종의 갈라파고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 혹자는 심지어 현재 한국 정보통신 분야가 겪고 있는 병폐를,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있어서 현격한 어려움을 겪는 전반적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즉 자폐증(autism)에 비유하기도 함.

2. 왜 그런가?

○ 한국 유선인터넷의 문제는 다음과 같음:

-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인권이나 기본권을 침해. 아울러 국내 사업자들에게도 상당히 불리하게, 일종의 역차별로 작용함. 해외 기업이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에는 그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임.
- 웹표준의 미준수 혹은 액티브엑스(ActiveX)의 문제. 이로 인하여 한국 내 사용자들은 액티브엑스의 반복적 설치로 인한 불편함으로 감수해야 함. 익스플로가 아니면 접속은 고사하고 가입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운영체제와 웹 브라우저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음. 아울러 액티브엑스는 보안에 취약함. 한국은 전 세계 유일의 MS 종속국.

○ 한국 무선인터넷의 문제는 다음과 같음:

- 한국 무선 인터넷이 저발전 상태였던 것은 우선 망사업자들의 비도덕적 사업모델과도 관련이 있음. 한국의 경우 무선인터넷의 생태계는 주로 망사업자들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구축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
- 망사업자들이 콘텐츠 시장을 장악한 것 역시 문제를 야기. 모바일 콘텐츠는 통신망이 아니면 유통이 불가능. 때문에 망사업자들은 본질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자기 망에 결합된 자사의 콘텐츠에만 서비스 특혜를 준다든지 망사용을 기준으로 한 콘텐츠 수익구조 분배에 심각한 왜곡을 야기.

3. 아이폰의 도입 이후

○ 아이폰 도입 이후 새로운 상황이 전개

- 그간 사용해서는 안 될 서비스로 낙인이 찍혀있던 무선인터넷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 가령, 미국의 통신업체인 에이티앤티의 무선인터넷 트래픽이 아이폰 도입 이후 3년 동안 49배 증가한 데 반하여, 케이티의 무선인터넷 트래픽은 아이폰 출시 불과 2개월 만에 12배 증가.
- 그동안 침체일로에 빠져있던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활력을 얻게 된 점, 제조, 유통, 교육, 광고, 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

○ 새로운 논점의 제기

-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거래 보안수단은 과연 타당한가?
-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타당한가?
- 주파수공용통신에 대한 국내 제도와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충돌 문제.
- 게임이나 유해매체에 대한 기존의 심의 방법은 유효한가?
- 망개방이나 망중립성, 콘텐츠 유통 구조의 개혁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실현할

것인가?

○ 현재까지 정부가 보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실망.

- 서울버스에 대해 경기도가 보였던 모습,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가공과 유통을 민간에게 허용하지 않는 점.
-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 적용 논란.
- 무선인터넷에서도 공인인증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점.
-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관련하여, 유튜브로의 동영상 업로드를 문제삼은 점.

4. 진보신당의 무상 무선 인터넷 구축 계획

○ 계획

-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① 서울시의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핫스팟존’화, ② 버스정류소, 지하철 역사, 관공서, 공원, 도서관, 미술관 등의 공공장소 및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지 지역, 인구 밀도가 높은 집단 거주 장소, 그리고 여타의 지역에서 점차적으로 핫스팟존을 구축, ③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 일반 주거 지역에서도 시민들로 하여금 마음껏 무선인터넷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

○ 가능한 반론

- 왜 하필 와이파이인가, 향후의 기술적 발전을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 _ 현재까지 데이터통신의 영역에서 와이파이 기술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음.
 - _ 대부분의 단말기가 이미 와이파이 접속 기능을 내장한 채로 출시되고 있음.
 - _ 이미 상당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가격이 저렴.
 - _ 와이파이 기술 자체도 계속 진화 중.
 - _ 그에 반해 한국의 핫스팟존은 불충분.

- 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는가?
 - _ 현재 일부 민간 기업들이 핫스팟존의 추가 구축을 염두에 두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모든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거나 사회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소수의 스마트폰 유저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 _ 스마트폰의 사용자수는 단시일 내에 크게 증가할 예정.
 - _ 이는 스마트폰의 문제만이 아님. 무상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
 - _ 제조, 유통, 교육, 광고, 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형성에

기여.

- _ 다양한 형태와 목적의 단말기 제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 _ 그로 인하여 행정서비스나 복지의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 _ 정보기본권의 보장.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로의 접근이나 가공능력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 때문에 유엔의 행정조정위원회에서는 1997년부터 인터넷 접속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 실제로, 에스토니아, 프랑스, 핀란드, 그리고 그리스와 같은 나라들은 이를 법적 권리로 인정. 이제 인터넷 환경 자체가 무선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모바일의 영역에서까지 모든 시민들의 자유로운 접속을 가능케 해야 함.

• 실현가능한 이야기인가?

- _ 이미 세계의 다양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선인터넷 네트워크의 구축에 앞장서고 있음. 미국만 하더라도 수 백 개의 지역이 관련 계획을 실행하였거나 계획하고 있으며, 유럽의 여러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브라질과 같은 남미국가,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 중국에 이르는 동북아시아 국가들까지도 이러한 경향에 동참. 오늘날 해외의 언론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Municipal Wireless Broadband 혹은 Municipal Broadband와 같은 용어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등장.

• 예산 계획은 있는가?

- _ 해외 사례를 고려했을 때, 무선 인터넷의 구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가짐.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 설정	제공 서비스 결정	실행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적용 기술 선택	
관련 정책 결정	실행 자금 조성	

_ 한편, 필라델피아 사례를 연구한 Munir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의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음. 지방자치단체 당국, 사회구성원(시민), 지역 관광 산업, 중소 신규 사업자, 대기업, 통신사업자, 비영리 사회집단, 교통/의료서비스,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초중등 교육기관.

_ 즉, 이상을 정리하면 실행자금은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을 조율한 이후 조성하는 것. 100% 세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조달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음. 진보신당은 무선인터넷의 영역에서도 정보기본권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그것이 관련 산업과 복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고 있음. 제공서비스와 적용 기술은 잠정적으로 결정한 상태. 이제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 조율과 관련 제도 정비 등이 남아있으며 이후 자금조성에 계획을 제시할 것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에 맞음.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예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거나 무선인터넷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